

## 국방부, 삼계탕·오리매운찜 등 장병 특별식 제공



국방부는 여름철 병사들의 체력과 입맛을 보강하기 위해 병사들이 선호하는 특별 급식 메뉴를 편성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병사들의 몸 보양을 위해 초복에 이어 중복, 말복에도 삼계탕, 닭곰탕, **오리매운찜**, 파닭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물·비빔냉면, 각종 냉채와 냉국 등 시원한 메뉴도 제공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 연합뉴스 [2014. 8. 1] <국방부 제공>

## 무등축산 김종구씨 훈제오리로 이웃사랑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담양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웃사랑이 전달돼 지역에 청량감을 주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대덕면



비차리 가흥마을에서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무등축산 김종구 대표가 더운 여름을 힘들게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훈제오리 350개(5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에 따라 더운 날씨에 건강이 염려되는 노인 및 아동가구, 장애인시설 등 35개소에 전달했다.

김종구 대표는 지난해 추석에도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훈제오리 200개를 대덕면사무소에 기탁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매년 대덕면 경로잔치를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 지역의 모범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힘든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정이 필요하다”며 “작지만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뿌듯하고, 오리훈제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불교공뉴스 담양군 [2014. 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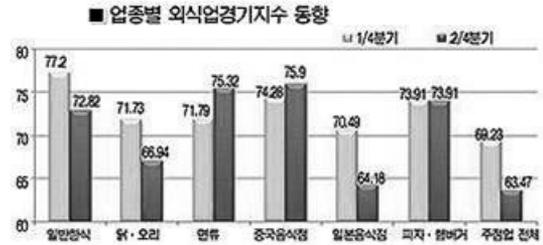
## 오리 사육환경 개선 표준설계도 보급

AI 종식을 앞두고 전남 함평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또 발생하자 농가들의 방역의식 개선 못지않게 사육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금처럼 비닐하우스에서의 오리 사육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축사 표준설계도 제작 보급과 국내환경에 적합한 사양관리 매뉴얼 보급을 추진키로 하고, 오리 사육형태별로 적용 가능한 표준설계도를 제작 보급키로 한 것.

농축산부는 또 오리농장에 대한 HACCP 인증을 확대함으로써 방역의식을 제고토록 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HACCP를 하게 되면 폐사율도 줄어들고 이로 인한 약품비도 절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 특히 농축산부는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교대잡종(F1)을 종오리로 둔갑해 사육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F1은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사육현황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있는 만큼 F1오리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2014. 08. 05]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외식업 매출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이번 분기 경기하락세가 컸던 닭·오리·주점업은 닭·오리(66.94↗미래83.87/△16.93), 주점업(63.47↗미래72.63/△9.16)의 미래외식업경기지수는 상승되어 다음분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외식업 BSI인 외식업경기지수와 더불어 제조업 BSI와 비제조업 BSI도 2/4분기 각각 77.0과 66.0을 기록하고 있어 2014년 2/4분기 경기부진이 대부분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분기 대비 다수 업종의 외식경기가 감소한 가운데, 면류 전문점은 지수가 소폭 상승, 한식 음식점은 소폭 하락, 중국음식점, 치킨·피자·햄버거 등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닭·오리 전문점, 일식음식점, 주점업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 하락폭이 컸다.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지역별 동향에서는 모든 지역이 전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경기도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

외식업체 규모별(좌석수·사업장면적·연매출) 동향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부분에서 하락세였고, 상권별 동향을 보면 주거지에 비해 상업지의 경기가 낮았다.

영업형태별로 보면 2014년 2/4분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외식경기가 하락했지만, 72.36에서 전분기(73.95) 대비 프랜차

## 닭·오리·주점업 외식업 경기지수 하락폭 커

외식산업의 2/4분기에는 닭·오리·주점업은 경기하락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T(사장 김재수)는 '2014년 2/4분기 한국외식업경기지수'를 발표했다. 이번에 조사된 한국외식업경기지수는 1분기 대비 2.56p하락해 71.28을 기록했고 이는 4월에

이즈는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은 소비 및 서비스업 등의 지표의 움직임을 볼 때 세월호 사고 이후 4, 5월 하락 폭이 컸으나 6월은 소폭 플러스로 예상하면서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타 산업분야에서도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외식업경기지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100이하로 경기침체시기를 겪고 있으나, '12년 4분기 이후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경기추세와 세월호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고 있는 소비심리를 반영하였을 때 3/4 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지수의 소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2014. 08. 05]

### 청주 오색인테리어자재총판, 노인 초청 오리탕 대접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의 오색인테리어자재총판(대표 이정훈)은

7일 말복을 맞아 관내 남부경로당 노인 50명에게 오리탕을 대접했다.

▶ 충청매일 [2014. 08. 07]

### 농축산부 전통시장 AI 차단방역 강화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업소 일제 소독 실시

고병원성 AI가 종식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농축산부는 잠잠하던 AI가 함평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업소를 일제히 소독하고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지난 8월 1일 밝혔다.

소독 주체는 한국토종닭협회가 맡았다. 토종닭협회는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상설 및 비상설 포함)내 모든 가금 판매업소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으며 한국오리협회와의 협의 하에 농축산부의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오리 판매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토종닭협회와 오리협회는 과거에도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었다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홍보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도 판매금지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판매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농축산부는 양계 및 오리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AI 발생농가에서 재입식한 이후 AI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지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축산부 측은 “시설미비 및 방역소홀 농장에서 AI가 재발되는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및 기 지원금에 대해 회수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14. 08. 07]

## 슈퍼마켓에서도 포장된 닭 · 오리고기 판매 가능

앞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 · 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 · 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8월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 · 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 · 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 · 오리고기도 팔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재는 영업자가 돈가스, 치즈돈가스, 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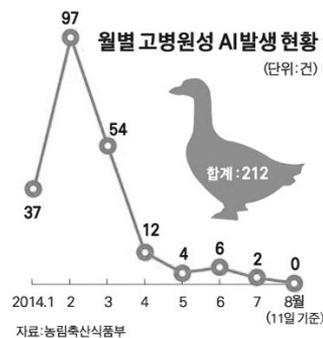
아울러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 · 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 ·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 창고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도축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번 위반해도 매번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에는 최고액인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연합뉴스 [2014. 08. 11]

## 닭 · 오리 밀집사육지역 AI 상시 집중관리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이 우려되는 철새 도래지와 가금류 밀집사육 지역을 상시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겨울철에만 발생하던 AI가 올 들어 여름에도 발생하면서 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관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가 많이 모이는 곳이나 닭과 오리를 많이 키우는 전국 132개 지역의 1,700여 농가(전체 가금류 농가의 35%)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3,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달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위생전실(외부와 차단된 클린룸) 및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기준이 깐깐해진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하게 된다. AI 예방 소독은 오리 등이 축사에 남아있던 상태에서 하던 방식이 아니라 일정기간 축사를 아예 비우고 소독을 한 뒤 다시 오리 등을 채워 넣는 식(All in-All out)으로 바뀐다.

아울러 가금류 농가의 90% 이상이 가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오리 등을 기르는 걸 감안해, 해당 업체가 정기적으로 소속 농가를 상대로 방역 교육과 소독, 예방 관찰(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에 나서도록 했다. AI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I 상시 검사 건수는 조기 발견을 위해 두 배 가량(올해 13만→26만 건) 늘린다. 특히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증상이 더딘 오리 AI의 발병 시 출하와 이동 전에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농가가 제외되거나 방역 조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 사육농가를 아우르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이밖에 농가에 대한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 도입, 주변국과 AI 정보 교류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 등이 추진된다. AI 방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1월 전북 고창군에서 발생한 AI는 5월 들어

잠시 주춤했지만 6월 중순(강원 횡성군), 7월 말(전남 함평군 등)에도 잇따라 발병하면서 연중 발생 우려를 키웠다. 이번 AI의 바이러스 유형은 H5N8형으로, 예전에 발생했던 H5N1형보다 전파 속도가 느리고 폐사비율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잠복기간(7일)이 두 배 정도 길어 방역당국이 애를 먹고 있다.

▶ 한국일보 김현수 기자 [2014. 08. 14]

## 압구정동에 오리 팝업스토어 생겼다

“너는 옷 사러 가니? 나는 오리 고기 먹으러 간다!” 패션의 거리 서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에 오리가 떴다. 국내 오리업계 1위 브랜드 ‘다향오리’가 국내 최초 가금류 정육점인 ‘다향 착한정육점’ 팝업스토어를 로데오거리에 최근 열었다. 다향 착한 정육점은 부화에서 사육,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리해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신선육만을 취급하는 오리고기 전문 브랜드다.

세련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다향 착한정육점’ 팝업스토어에선 오리와 닭을 다채로운 조리법을 동원해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 특별가격으로 판매, 가격도 착하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열혈 오리불고기 덮밥’. 6,000원에 푸짐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매일 달라지는 오리 혹은 닭고기 메뉴에 신선한 시즌 야채와 각종 견과류, 소스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샐러드바도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다향 착한정육점 팝업스토어는 9월 1일까지

오븐한다.

여름의 막바지, 오리 요리로 허해진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보자. 오리는 '날개 달린 소'라고 불리며 예로부터 삼계탕, 장어백숙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보양식으로 꼽혀 왔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의 고서에 '오리고기는 허약한 몸을 회복해주는 보약의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을 이롭게 하고 열독과 어혈을 제거한다'고 기록돼 있다.

오리고기는 육류 중 유일하게 알칼리성을 띠는 식품으로 노화의 원인인 산성화를 막아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동맥경화, 심장병 등과 같은 성인병 걱정이 없다. 게다가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에게도 훌륭한 보양식이 된다. 쇠고기는 사쥐도 먹지 말고, 돼지고기는 사주면 먹고, 오리고기는 내 돈 내고 먹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

그동안 오리고기는 닭고기보다 크기도 크고 가정 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요리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대부분 탕·구이 등 외식 메뉴로만 주로 활용되어 왔다. (주)코리아더커드 기획실 이근준 대리는 "최근 들어 훈제오리, 오리볶음, 훈제오리겹살, 오리버거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개발되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오리고기 요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귀띔한다.

이 대리의 도움말로 '다향 착한정육점' 팝업스토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인 '열혈 오리 불고기 덮밥'의 요리법을 알아본다.

### ◇ 다향 열혈오리 불고기덮밥 (1인분)

〈재료〉 오리 정육 슬라이스 120g, 양파 ½개, 파프리카·가지·대파·새송이버섯 ¼개씩, 달걀 1개, 양념장(고추장·고춧가루 2큰술씩, 고추기름·맛

술 1큰술씩, 마늘 ½큰술, 설탕 ¼큰술, 후춧가루 약간).

〈만들기〉 ① 오리고기는 키친타월에 올려 핏물을 뺀다. ② 양파는 1cm크기, 파프리카 가지는 2~3cm 크기로 썬다. ③ 대파는 어슷썰기하고, 버섯은 4cm 크기로 자르거나 먹기 좋게 잘라놓는다. ④ 양념장 재료를 모두 섞어 놓는다. ⑤ 큰 볼에 오리고기를 넣고 양념장을 넣은 뒤 잘 버무려 1시간 정도 냉장 고에 넣어둔다. ⑥ 파프리카, 가지, 버섯은 각각 식용유를 살짝 두른 프라이팬에 볶아 둔다. ⑦ 달걀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재워둔 오리고기를 볶는다. ⑧ 고기가 거의 익으면, 양파와 대파를 넣고 한번 더 빠르게 볶아준다. ⑨ 밥 위에 볶아낸 오리불고기를 얹고, 따로 익혀놓은 파프리카, 가지, 버섯을 올린다. ⑩ 달걀을 프라이해 ⑨위에 올려낸다.

▶ 국민일보 김혜림 선임기자 [2014. 08. 19]

## 연중 시에 오리농가 절반 휴·폐업... 줄도산 위기



〈앵커〉 AI가 일 년 내내 발생하면서 오리 농가들이 축사를 비운 채 일손을 놓고 있습니다. 살처분 여

파로 알을 낳을 수 있는 오리 수가 줄면서 새끼 오리마저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표언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리 3만 마리를 키우던 충남 천안의 한 농가입니다. AI가 발병한 지난 2월부터 반년 넘게 축사를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근처의 다른 농가는 더 심각합니다. 빌린 땅에 2억 원을 투자해 지은 축사를 놀리면서 매달 100만 원 넘는 월세만 내고 있습니다.



[조규형/오리농가 주인 : 1년에 7~8번을 입식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번을 하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 수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오리농가 축사가 텅 비게 된 것은 올해 AI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종오리 농가들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AI에 따른 살 처분 등의 여파

로 부화용 알을 낳는 종오리 수가 3분의 1로 줄면서, 덩달아 농가에서 키워 팔 새끼오리마저 부족해진 겁니다. 이 때문에 올 들어 총 오리 사육 두수는 54.2%나 급감했고 휴·폐업한 오리 농가만 43.9%나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리고기 수요가 줄었다며 가격 폭등은 없을 걸로 봅니다.

[농림부 공무원 : 오리가 부족하고요. 수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종오리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면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사육농가가 크게 준데다 AI가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오리를 새로 키우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SBS뉴스 [2014. 08. 20]

**축산 인식개선 공동캠페인 본궤도  
축산자조금 자문위원회서  
슬로건·세부일정 설명**

전 축종자조금 공동으로 이뤄지는 '축산물 및 축산업 인식개선 공동 캠페인' 사업이 마침내 본 궤도에 오른다.

9개 축종자조금이 참여, 이번 캠페인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자조금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제1차 캠페인 자문위원회를 갖고 최근 확정된 통합슬로건과 함께 세부일정을 설명했다.

축산자조금은 우선 캠페인 담당조직인 '축산자조금'의 명칭을 축산자조금연합으로 변경했다. 또 다른 축종의 자조금으로 소비자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축산자조금연합에 따르면 공동캠페인의 슬로건은 '건강한 대한민국의 힘, 우리축산'으로 결정됐다. 건강을 지켜주는 단백질 식량으로서, 축산물과 식량 안보차원에서 지켜야 하는 축산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 모두 3단계에 걸친 중장기 목표도 설정됐다.

제1단계로 캠페인 원년인 올해는 축산물과 축산업 관련 부정적 인식 개선에 집중하되, 2단계인 2015년은 축산업의 지속발전 필요성 및 축산물 호감도 제고, 3단계인 2016년에는 미래중심의 산업으로서 축산업 가치를 공유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자조금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언론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이번 캠페인의 의미와 목적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에는 축산물과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공중파 다큐멘터리 제작과 방영,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홍보, 라디오광고 등의 사업이 전개될 예정이다.

▶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2014. 08. 18]

##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대폭 강화 발생농가 심하면 폐업까지 기준 미달 시 재입식 불가능

AI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이 대폭 강화 됐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금사육 농가는 보상금 상당부분 감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AI 양성농장이 이후 재입식을 원해도 울타리 및 담장 미설치 등으로 감액기준 사항을 미 충족 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개편 방안을 포함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감액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종으로 세분화 한 것이 특징이다.

AI 양성농장 추가 감액 기준을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 미신고와 해외 출입국 신고 소독 불이행 시 보상금의 80%를 감액했지만, 단순미신고, 소독 등 미이행, 교육 미실시에는 보상금 감액을 10%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AI 발생과 연계될 경우 6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축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장은 보상금을 50% 감액하고, 축산법상 적정 사육두수 초과분은 보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방역소홀로 동일 농장주·농장에서 연속 AI가 발병할 경우 추가 감액된다. 이에 AI가 발병해 종식되기 전까지 2회 발병 시에는 80%를 감액한다. 축산업 미허가·등록 시 10% 감액 지급한다.

이외에도 △축사 파손방치(쥐 등 출입 방치) △사료 잔존물 방치 △축사 내외부 불결(먼지 등 비산) △야생동물 방지 대책(구서) 미시행 △기타 차단방역 기준 미이행 △울타리·담장 미설치 등 사항이 체크될 경우 각각 5%씩 추가 감액한다.

전남의 한 농가는 "양계농장에서 AI가 발병하면 기준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서 계열화 업체에 병아리와 사료가격 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감액기준을 강화하면 AI 발병 농장은 빗더미 위에 앉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농장도 이번 감액 기준 30개 항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입식을 준비할 때 이번 감액 기준의 체

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재입식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 보수를 위해 추가로 빗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의 농장은 폐업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산부가 이번에 발표한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에는 △AI 위험 알림시스템 운영 △AI방역관리지구 지정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 △방역대 탄력적 설정(기본틀 유지,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살처분 최소화(발생농가만 살처분 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2014. 08. 22]

**AI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최대 80% 감액 정부방침에  
“원인 불명확한데...” 농민들 불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 닭·오리 사육농업인들은 농가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차단방역과 방역시설 기준, AI 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감액률을 각각 정했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가는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이 20% 삭감되며, 방역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80%까지 추가 감액된다. 반면 방역활동 우수농가는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경감 받게 된다.

하지만 가금류 사육농가들은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AI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

리를 높이고 있다. 충남의 한 닭 사육농가는 “정부 조치 철새를 AI의 발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제한 뒤 “설사 이번 조치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AI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배려 없이 농가에 대해 보상금 삭감만 강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남의 한 오리 사육농가도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검사를 통과한 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입식하고 방역에 만전을 기했던 함평의 오리농장에서 AI가 재발한 것을 보면 AI 발생이 농가의 부실한 방역 때문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며 “평소 방역에 최선을 다한 농가에 대해 AI 발생 책임을 묻는다면 발생원인을 놓고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열회사에 방역 책임을 부여하는 ‘계열회사 책임방역관리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역이라는 미명하에 계열회사들이 농가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래 취지대로 방역에 초점을 두면 괜찮은데 계열회사가 이를 악용, 농가에 대해 축사를 개선토록 하거나 방역비용을 요구하면 농가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닭 사육농가의 90%, 오리 사육농가의 95% 이상이 수직계열화돼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열회사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엔 공감하지만 자칫 악용될 경우 농가 부담이 늘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한 것이다.

닭 생산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선안을 보면 농가 보상 및 지원제도는 다소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AI 발생 책임을 농가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이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발생농가의 보상금 감액에 대해선 예전부터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 농민신문 김철웅·최문희 기자 [2014. 08. 25]